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1월 25일



## | 금주의 이슈 |

- I. 리더십이 살린 일본경제 - 아베노믹스 경제학 / 3
- II. 美, 세이프가드 발동: 2018년 통상환경과 시사점 / 9



## 금주의 이슈

■ 금주(1월 넷째 주)는 지역경제, 통상에 관한 2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일본경제의 성공적 부활을 가져온 아베노믹스의 추진과정과 성과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제2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동된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위시한 2018년도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1편 : 리더십이 살린 일본경제 - 아베노믹스 경제학

戰後 2번째로 긴 경기확장기를 맞고 있는 일본 경제의 20년 디플레 극복의 견인차로 부각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정 및 향후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시의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 보수-진보 정책간의 균형, 시장과의 소통, 강력한 리더십 등이 일본의 경제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제2편 : 美, 세이프가드 발동: 2018년 통상환경과 시사점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미국의 세이프 가드 발동(1.22) 등 對한국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협상과정에서 빚어지는 대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 1. 25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

# 1. 리더십이 살린 일본경제 - 아베노믹스 경제학

작성: 경제정책실<sup>1)</sup> ☎02-6288-0531

戰後 최장기 경기확장을 눈앞에 둔 일본 경제의 주된 배경은 ‘디플레 극복과 일본再生’을 기치로 내세우고 강력히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임. 시의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 보수-진보 정책간의 균형, 시장과의 소통, 강력한 리더십 등이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한 요인

## 1. 일본, 戰後 최장기에 걸친 경기확대 기대 고조

- 최근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경기’라 불리며 전후 2번째로 긴 경기확장기를 맞이함
  - 아베(安部晋三)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확장 기조가 2017년 11월까지 총 6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음
    - 이는 1986년 11월에서 1991년 2월까지 총 51개월간 경험한 戰後 2번째로 긴 경기확장기인 이자나기경기(いざなぎ景気)를 넘어선 수준<sup>2)</sup>
- 1년 후인 2019년 1월에 이르면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기를 맞게 되는 것임
  - 戰後 일본의 최장 경기확장기는 2002년 1월 ~ 2008년 2월에 이르는 73개월간의 이자나미경기(いざなみ景気)임
  - 일본 내각부의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전망에 따르면 민간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7년도 1.9% 성장에 이어 올해에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

1) 작성: 이부형 박사(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이종인(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 실장)

2) 이자나기(伊邪那岐)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신이자 일본 천황가의 황조신을 말하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이자나미(伊邪那美)임.

### 〈일본의 경제 현황 및 2018년도 전망〉

구분	2016년도	2017년도(예측)	2018년도(전망)
<b>실질 GDP(%)</b>	<b>1.2</b>	<b>1.9</b>	<b>1.8</b>
민간소비	0.3	1.2	1.4
민간기업설비투자	1.2	3.4	3.9
<b>내수 기여도(%p)</b>	<b>0.4</b>	<b>1.6</b>	<b>1.6</b>
민간수요 기여도	0.3	1.3	1.5
공공수요 기여도	0.1	0.3	0.1
<b>외수기여도(%p)</b>	<b>0.8</b>	<b>0.3</b>	<b>0.1</b>
<b>명목GDP(%)</b>	<b>1.0</b>	<b>2.0</b>	<b>2.5</b>
<b>소비자물가(%)</b>	<b>-0.1</b>	<b>0.7</b>	<b>1.1</b>
<b>실업률(%)</b>	<b>3.0</b>	<b>2.8</b>	<b>2.7</b>

주: 통계 기준은 전년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임.

## 2. 아베노믹스의 추진과정 및 성과

### □ 아베노믹스의 의의와 추진 과정

- 아베노믹스는 ① 통화·금융완화, ② 재정투입 확대, ③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 추진 등 3개 전략(3개의 화살)을 통해 디플레 극복과 일본재생을 꾀하려는 성장 중시 전략을 의미
  - 2013년 4월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책 발표 이후 본격화된 통화·금융완화정책 추진
    - 2014년 10월 양적·질적 완화 확대, 2015년 후속보완조치, 2016년 1월 마이너스금리 도입, 2016년 7월 자산추가 매입, 2016년 9월 장기금리조작 등
  -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13.1조엔에 이르는 추경 편성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확대
    - 2013년 10월 5.5조엔, 2014년 12월 3.5조엔, 2015년 12월 3.3조엔, 2016년 8월 28.1조엔의 대규모 추경 예산 투입
    - 2018년에도 2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예정



- 아베노믹스는 통화·금융완화 → 엔저와 주가 상승 유도 → 기업의 수익성 개선 → 투자·고용 확대 → 임금 상승 → 소비 증대 → 기업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총통화 공급량(기말 평잔 기준)은 2012년 12월 827.7조엔에서 2018년 1월 991.1조엔으로 약 20% 증가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12월말 86.12엔/달러에서 2018년 1월 12일 현재 111.23엔/달러로 약 29% 상승
  - 닛케이주가는 2012년 12월말 1만 395.18엔에서 2018년 1월 16일 2만 3,951.81엔으로 약 130% 상승

**□ 일본경제 전반의 개선 달성**

- 일본정부 스스로 ‘경제의 호순환이 확대 중’이라 주장할 정도로 경제 지표 전반의 개선을 달성
  - 아베노믹스 초기인 2013년도에 있어서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약화되는 등 대외적 악재가 해소 국면에 진입된 것이 아베노믹스 성공의 주요 발판이 됨
    - 미국 경제의 회복 국면 진입 등 세계 경제 전반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아베노믹스의 성공 배경 중 하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일본정부의 평가>**

① 과거 최고 수준 GDP 달성	명목 GDP ‘12년도 495조엔→‘16년도 537조엔(9% 증가)
② 고용 증가	취업자수 ‘12년 대비 ‘16년 185만명 증가 (‘16년 정규직 50만명 증가)
③ 임금 상승	3년 연속 2% 이상(‘14년 2.07%, ‘15년 2.20%, ‘16년 2.00%)
④ 과거 최고 수준의 기업수익	경상이익 ‘12년도 48.5조엔→‘16년도 75.0조엔(약 55% 증가)
⑤ 설비투자 회복	‘12년도 71.8조엔→‘16년도 82.6조엔(15% 증가)
⑥ 1990년 이후 최저 수준 도산건수	‘12년도 1만 1,719건→‘16년도 8,381건
⑦ 구조개혁	전력·가스소매 자유화, 농협개혁, 재생의료제도 도입, 법인실효세율 인하(‘14년도 34.62%→‘18년도 29.74%) 등

### 3. 아베노믹스 평가 및 시사점

#### □ 아베노믹스의 진화: 4차 아베내각의 경제정책 방향

- 아베총리는 지난해 11월 1일의 4차 아베내각의 정책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재만들기 혁명, 생산성 혁명의 2가지 전략을 담은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제시<sup>3)</sup>
  - 동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 생산성 혁명에 도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총요소생산성과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정체되면서 1%대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더불어서, 2조엔의 재원 마련을 통해 0~5세 아동 교육은 물론 사립고·대학 교육의 무상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인재만들기 혁명을 추구
-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생산성, 설비투자, 임금상승 등의 효과 기대
  -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견인
  - 설비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0% 증대
  - 2018년도 이후 3% 이상의 임금상승률 달성 기대

#### □ 평가 및 시사점

- 특히 4차 정책 패키지의 경우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본연의 목적인 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통한 디플레 탈출 및 일본재생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
  - 초기 아베노믹스는 엔화 평가절하, 주식시장 부양 등과 같은 수출 (大)기업 중심의 당근책으로 낙수효과를 유도

---

3) 제3차 아베내각은 2015년 4월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기존 3개의 화살 강화(명목 GDP 600조엔 달성), 꿈을 엮어내는 육아 지원(희망출산율 1.8, 대기아동해소,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등),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간병이직제로, 생애현역사회 구축 등) 등의 新3개의 화살을 제시한 바 있음.

- 하지만, 임금 상승과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생산성 개선 정체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여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
  - 더욱이 높은 수준의 생산성 개선이 따르지 못할 경우 여성,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노동시장 유입을 확대하여 노동투입 규모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아베노믹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시의적절하고 매우 빠른 정책의사결정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음<sup>4)</sup>
-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5년 만에 3번의 정책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정도 정책의사결정이 신속하였음
  - 아베내각 출범 후 5번의 주요 추경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후 12월에 결정된 추경과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 보수적 정책 및 진보성향의 정책들이 질서 있게 균형을 맞추어 감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아베노믹스 진화 과정을 보면 초기 3개의 화살은 성장중시전략으로 전형적인 보수정책, 新3개의 화살은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꾀하는 보수-진보 균형정책, 새로운 정책 패키지는 新3개의 화살에서 피한 보수-진보 균형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균형은 헌법개정, 사학스캔들<sup>5)</sup> 등으로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경험했음에도 아베내각의 지속과 아베노믹스의 추동력이 되고 있음

4) 2017년 11월 1일 있었던 제4차 아베내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 ‘결과 중시, 일 중심, 실력본위의 태세가 필요하다’,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는 과거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임.

5) 일본의 사립교육기관인 가계학원(加計学院)그룹의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 신설계획을 둘러싼 문제. 2017년 5월 17일 아사히신문이 ‘총리의 의향’ 등이라고 기록된 문부과학성의 문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한 것을 계기로 스캔들로 비화. 이후 아베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으나, 수개월만에 40%대를 회복. 2017년 10월에 있었던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전체 465석 중 과반수를 넘는 284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9석으로 전체 2/3을 넘는 수준으로 압승.

- 임금 인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베내각의 당근을 이용한 시장과의 소통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
  - 엔화 평가절하와 주가 상승은 일본기업들에게 아베내각이 준 최대의 당근
  -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케이단렌(經團連)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 2018년도 춘투(春闘, 일본의 노사간 임금협상) 때 경기 회복의 상징으로 임금인상률 3%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
  
-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완전한 성공은 아님. 하지만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
  - 확고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대책마련과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당근과 채찍을 활용한 시장과의 의사소통 노력, 리더의 강력한 의지 등의 리더십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II. 美, 세이프가드 발동: 2018년 통상환경과 시사점

작성: 이승우 객원연구위원, 이종인 경제정책실장 ☎02-6288-0535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세이프 가드 발동(1.22) 등 對한국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협상 과정에서 빚어지는 대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II. 美, 세이프가드 발동: 2018년 통상환경과 시사점

### 1.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지속 및 확산에 대한 우려

#### □ 미국발 수입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지속

○ 2017년 연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미국발 수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 34건('15) → 44건('16) → 27건('17)

\* 미국의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4건('15) → 5건('16) → 8건('17)

#### 〈2017년 국별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건수	국가명	합계	미국	터키	중국	아르헨	호주	말련	베트남	브라질	인도	멕시코	사우디	일본	캐나다
조사개시 건수		27	8	4	3	2	2	1	1	1	1	1	1	1	1

-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강화뿐 아니라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 개시
- 2건의 세이프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1.22 최종 승인함에 따라, USITC (미국무역대표부)의 권고안대로 조치가 추진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해당 기업의 국내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상무부의 재량권 확대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업계에 대한 피해가 큰 상황**

○ 중국을 겨냥하여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된 AFA 및 PMS 조항이 한국에 대해서도 빈번히 적용되면서 피해가 커짐

- AFA(Adverse Facts Available):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조항을 근거로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 증가

\*AFA: 수출기업이 조사당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제소기업들이 제공한 불리한 자료들)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미국의 AFA 적용 기업수 추이>**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FA 적용	1	1	2	9	1	23	5	29	40
AFA 미적용	2	2	9	17		27	10	30	37

**<미국의 AFA 적용 덤핑마진(평균)>**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FA 적용	121.39	23.21	90.49	67.58	29.98	120.07	25.44	46.13	108.03
AFA 미적용	1.17	34.59	27.21	15.95		14.52	23.40	9.14	20.16

주: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美상무부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및 송유관의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PMS를 적용하여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

\*PMS: 조사당국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비교 기준이 되는 수출기업의 구성가격(국내가격) 산정을 위해 제공한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의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

- PMS는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상황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판정하는 바, 공정이 유사한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금년 1월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작년 유정용 강관에 적용된 PMS를 그대로 인용함

**□ 미국의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가안보위협 조사(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결과에 따른 조치 확정시 큰 파장 예상**

- 美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1.11)하였으며,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제한조치 여부를 결정
- 미국이 EU와 일본, NA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을 제외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성 상존

**□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EU, 일본, 중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 EU집행위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시 중국산 제품의 과잉공급 등 업계 우려를 반영하여 반덤핑 규정을 개정(17.12.20 발효)
  - ‘중대한 시장왜곡(significant market distortion)’여부에 따라 덤핑마진을 산정, 이를 위해 집행위가 특정 국가 또는 분야의 시장 왜곡 판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 ‘시장왜곡’판단의 자의성, 판단 기준에 국제노동기준 포함 등이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未비준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관련)
  - 반덤핑 조치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일본도 작년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12월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41.8%/69.2%)를 잠정적으로 부과 중
  - 한국 관연결구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2. 한미 FTA 개정 협상

### □ 양측 모두 금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미측은 선거 뿐 아니라 NAFTA 개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한미 FTA 개정(수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

### □ 방어적인 입장의 협상에 따른 어려움

- 한미 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
  - 협상의 목표는 상호 이익 균형 보다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 개정 협상에 따른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양국이 협상의 범위와 어젠다마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한 대내적 반대 또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우리의 경우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제한적이거나 대내 의견 수렴이 중요

## 3. 검토의견 [당에 주는 시사점]

### □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 체계화 필요

- 수입규제는 일차적으로 기업이 대응을 해나가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시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현재 對한국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외적 및 대내적 대응이 부처간 이원화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 ① 무역구제조치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② 관련 외국 조사당국에 대한

- 아웃리치 활동, ③ 필요시 외국의 부당조치에 대한 WTO 제소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필요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외교, 정치적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투명성 제고가 필수
- 통상정책 또는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됨
-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있고 여전히 하향식(top-down)의 구조로 진행
  - 통상절차법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학계 및 연구자 중심에서 탈피하고, 동 위원회를 형식적인 회의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문 및 협의 기능으로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http://www.ydi.or.kr)

---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